

‘6.25 전쟁’과 ‘국군포로’에 대한 착안

고민성 (고베대학)

1. 들어가며

1.1 ‘국군포로’란 무엇인가?

본연구에서 거론되는 ‘국군포로’란 한국에서 유래된 단어이며, 그 뜻은 한국군이 상대 측의 포로로 잡힌 군인임을 뜻한다. 당연하겠지만 여기에서 거론되는 포로는 한국군으로서 온갖 전쟁에 참전한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 국회에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 및 대우 등을 염두에 둔 법률인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1999 년에 가결되었다. 그리고 그 법률이 2007 년에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된 이후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해당 법률에서 거론된 전쟁이란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6.25 전쟁’ 및 ‘월남전’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여기서 언급된 군인이란 이들 전쟁에 관여된 포로가 대상자의 대부분이라 생각된다. 게다가 이러한 전쟁 가운데에서 포로의 규모 및 전쟁기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날까지 정전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한국에서 ‘국군포로’라고 한다면 사실상 ‘6.25 전쟁’에 관여된 포로라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1.2 연구배경 및 종래의 연구

주지하듯이 ‘6.25 전쟁’은 다양한 국가가 참전한 국제적인 전쟁이기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출신의 포로에 관한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남북 양측의 군인은 물론이며, 중국인민지원군 및 유엔군의 포로에 대한 취급 문제, 정전협정체결에 관한 교섭 및 그 교섭의 지연에 이르게 된 요인으로서의 포로와 같이 ‘6.25 전쟁’의 포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그러한 포로 가운데 하나였던 ‘국군포로’에 대해서 ‘6.25 전쟁’과 관련을 지어서 실시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또한,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그들 포로가 여전히 북측에 억류되어 있다는 점과 같이, 남북 양측의 국제정치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포로에 대한 인권 문제 및 송환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나아가서 탈북자 문제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즉, 정책적 제언을 염두에 둔 공학적 연구가 주류가 되어 있으며, ‘국군포로’를 둘러싼 환경의 ‘진상’ 규명이 중심이 되어 있기에 ‘국군포로’ 문제의 정치적 본질을 언급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경향은 ‘6.25 전쟁’에 대한 소위 ‘북한책임론’의 연장선상에서 보인 움직임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3 본연구의 필요성

이러한 ‘국군포로’ 문제야 말로 오늘날까지의 한국 정치에서의 권력자가 정치적 지배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중요한 재료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군포로’라는 단어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원래 다양한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모두가 ‘6.25 전쟁’과 관련을 지어서 인식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정치적 상황이 관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포로에 관한 연구는 기타 출신 · 국가, 공산군을

포로로 잡은 소위 ‘반공포로’에 대한 연구, 그러한 그들을 통한 ‘국민’ ‘국가’ 만들기의 관련성을 주창한 연구는 존재한다. 그러나 역으로 ‘국군포로’와 관련해서는 ‘공산군’ 측의 포로 수용소의 운영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거론된 연구 이외에, 기본적으로 인권 및 송환 등을 취지로 한 연구가 주류이다. ‘국군포로’ 문제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수십 년 경과하고 나서 겨우 법률이 가결될 때까지 긴 시간동안 ‘방치되’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치야 말로 한국 ‘국가’ 및 ‘국민’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반증임을 추궁하고자 한다.

따라서 ‘6.25 전쟁’으로 발생한 ‘국군포로’가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봐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우선 원점이 되는 정전협정 교섭 중에 포로의 교섭 상황은 어떠했으며, 또한 이승만 정권은 ‘국군포로’를 어떠한 위치에 지우고 있었는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6.25 전쟁’의 고착화와 포로

2.1 전쟁 중의 포로의 상황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간 지속되었는데, 전선이 극적으로 이동했던 것은 처음 1년 정도였다. 1951년 중반부터 전선은 오늘날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거의 안 움직였고, 국지적 전투가 지속될 뿐이어서 그 때마다 남북 양측의 포로가 늘어났다. 정확한 인원 파악은 어려우나 대표적인 수용소였던 거제도의 ‘공산군포로’ 상황을 보면, 1951년 6월에 최대 17만 3,000명(조선인민군 15만 명, 중국인민지원군 2만 명, 의용군 등)의 포로가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즉, ‘6.25 전쟁’에서 공산군 포로의 총원은 적어도 수십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군포로’도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어려우나,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이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는 ‘국군포로’ 및 실종자를 약 82,000명으로 추정됐었다².

2.2 정전의 필요성과 포로

전선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소모적 전투만이 전개됨으로써 1951년 1월부터는 포로의 처리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³. 유엔정치위원회에서는 1951년 1월에 ‘6.25 전쟁’에 관한 투표가 실시되는 등, 비록 부결이 되기는 했으나 참전국 사이에서는 정전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짐을 암시했었다. 미국에서는 소련과의 회담을 염두에 두고 처음에는 정전에 관한 ‘3개조’⁴가 결정되었고, 이는 조만간 정전협정 교섭 과정으로의 돌입을 의미했었다. 그리고 1951년 6월에는 소련의 유엔 수석대표였던 말리크가 미국 측과 유엔에서 정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정전에 관한 ‘5개조안’ 및 소련의 골자안을 내는 등이 전개됐었다. ‘5개조안’에 따르면 제 4항목에 ‘一、休戰과 捕虜交換을 監視할 國際委員會를 設置할 것’이라 명기되는 등 최종요약제는 포로의 처리였다⁵. 최종적으로 공산군 포로는 한국군 및 유엔군 측이 확보한 포로에 비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압도적으로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유리한 교섭으로 끌고가기 위해 포로를 포함한 정전 관련 회담은 진행이 더디었다.⁶

¹ https://www.gmdc.co.kr/pow/sub04/sub04_01_02.html(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포로수용소 자료)

² 조성훈 「6·25 전쟁 중 북한 포로수용소 실태와 국군포로 사망자 유해 발굴 가능성」 『군사』 7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p. 159.

³ 「蘇停戰七項目拒否」 『동아일보』, (1951.01.11).

⁴ 「美對蘇三個條決定」 『동아일보』, (1951.06.29).

⁵ 「彼我停戰五個條項提示」 『동아일보』, (1951.07.05).

⁶ 「失郷私民未歸還과 要請되는 對策」 『조선일보』, (1954.03.04).

2.3 정전협정에서의 ‘포로’ 처리의 위치

정전협정 제 3 조 제 51 항에서 제 59 항은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로 체결될 정도로 포로문제는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 남북 혹은 제 3 지대 등 기본적으로는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Repatriation(송환)’을 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소수의 포로 교환을 실시해, 협정 발효된 다음해에도 포로의 교환이 지속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음해에도 포로 교환이 실시된 상황은 이미 그 시점에서 포로 문제가 만연화가 될 징조와 다를 바 없었다. 왜냐하면 각 군이 수용한 포로에 대해서는 본래 협정 발효로부터 60 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제 54 항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교환은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국군포로’는 약 8,200 명의 귀환에 그쳤던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에 대해 이전부터 강하게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었다. 당연히 포로를 교섭 대상으로 한 사실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과연 포로에 대한 이승만의 사고방식은 어땠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포로’에 관한 이승만 정권의 사고방식

3.1 ‘반공포로 석방사건’의 발생

1953 년 6 월 18 일에 ‘공산군’ 포로를 이승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석방한 ‘반공포로 석방사건’이 발생했다. ‘제네바협약’ 및 ‘인권정신’을 거론하긴 했으나, 사건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반공’의 기치를 내세운 전향 군인에 대한 석방이었다. 이승만 스스로가 밝힌 바와 같이 유엔군과의 상담은 없었다⁷. 27,388 명이 석방됐는데, 이는 정전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불만 표출이었다⁸. 게다가 주된 대상자는 ‘한인출신’이었다. 정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승만 정권은 ‘6.25 전쟁’에 대한 정당성과 ‘민족’적인 정통성 어필을 할 기회로 삼기 위해 포로에 대한 태도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석방후의 ‘반공포로’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맞이하여 오는 23 일에(1954.01.23) 석방된 이후에 한국군으로 징모되지 않는다’ 및 ‘엄격한 의미로서의 민간인’과 같이 표현하는 등 결코 다른 ‘순수’한 민간과는 다른 분위기가 빚어지고 있었다⁹. 그 때문인지 ‘반공포로’ 출신자는 한국군으로의 자원입대 및 선진문물 습득이라는 명목으로 미국행을 희망하는 자가 많았으며, 한국 ‘국민’인 사실을 필사적으로 증명해야 했다¹⁰.

3.2 ‘국군포로’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태도

그런데, ‘반공포로’의 석방은 아무리 수용소에서 ‘교화’가 실시되었다고 해도, ‘한번 공산당에

‘우리가 反共捕虜들의 自由와 人權을 保護하기 爲하여 一年餘나 戰爭을 더 繼續한 事實을 回顧한다면 이들 被拉致人士들의 返還을 爲하여 이와 同一한 態度를 取하여야 한다는 理論도 首肯해야 할 일이다’는 등 포로의 교환조건 교섭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전쟁이 길어지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⁷ 「反共愛國捕虜를 全部釋放」 『경향신문』, (1953.06.19).

⁸ 정찬대 「광주상무대 포로수용소 실태 현황과 포로석방 사건 : ‘반공포로수용소’ 사례 연구」 『역사연구』 제 37 호, 역사학연구소, 2019, p.517.

단, 실제로는 전쟁 막바지에 정치·군사적 실리 획득을 염두에 둔 이승만과 체제우위의 확립을 염두에 둔 미국 측의 이해가 일치하여 양측의 ‘암묵적 동의’에 의해 실현된 정치적인 행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⁹ 「反共捕虜가 釋放되면 徵募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1954.01.04).

¹⁰ 「全員入隊希望」 『경향신문』, (1954.02.06).

물들여지면 빠지기 힘들다’¹¹ 와 같은 이승만 정권의 지론을 생각한다면, 일종의 정치적 도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포로에 대한 태도의 돌변을 보면, 이러한 지론은 상대 측에 잡힌 ‘국군포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신성모가 언급한 내용으로부터 그러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신성모는 본래 명백한 ‘국민’인 ‘국군포로’에 대해 ‘공산진영의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하여도 결코 공산당이 될 수 없다고 믿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당분간 사회와 격리시켜 사상의 ‘재교육’을 반년동안 실시할 필요성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었다¹². 즉, ‘공산주의’를 한 번이라도 접한 자는 한국을 수호한 ‘국군’이라 할지라도 잠재적인 ‘적’과 동등한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3 ‘북진통일론’과 ‘국군포로’의 거론

주지하듯이 정부가 수립된 직후부터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 등의 구호를 주창했었다. 그리고 남북 양측은 전 조선반도에서의 정치적인 정통성을 필요로 했던 상황이었다. 애당초 ‘6.25 전쟁’이 정통성을 위한 전쟁이었음을 감안하면 어중간한 형태로 정전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나타내는 것은¹³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정전 후부터의 한국에서는 ‘국군포로’는 ‘반북’ 운동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으며, 또한 미귀환 포로에 대해서는 대북 비난의 재료로 오랫동안 쓰여 온 것이다. 즉,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정전 이후 정권의 상황에 따라 정치적 재료로서 쓰일 장소가 정전교섭 중의 이승만정권의 태도에서 이미 보였었다는 뜻이 된다.

4. 향후의 과제

본발표에서는 이승만 정권의 정전에 대한 반응과 포로의 관계를 거론했다. 결국 포로는 진정한 ‘국민’으로 취급되지 않았으며, 체계적인 대우에 관한 법률도 냉전체제 붕괴 이후까지 사실상 전무했다. 그들은 정치적 운동에는 동원됐고, 더욱이 한국으로의 귀환을 하지 못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북측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재료로서 쓰여왔다. 그런데 왜 ‘적’인 ‘반공포로’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사회로 적극적으로 진입을 시켰으며, 정부로서 본래 대우해야 마땅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반공포로’와 동등하게 ‘교화’가 시행됐을까. 이들 포로 모두 한국 ‘체헌헌법’에 기반하면 원래 모두 ‘국민’으로서 적용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승만 정권의 ‘공산주의’에 관한 지론이 우선시된 결과 이러한 ‘불안정한 재료’의 수용이 실현됐다. 다만, 정전이 결정적이게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전부터 존재한 ‘북진통일’ 등의 구호는 오히려 강화됐고, 게다가 다양한 포로라는 ‘유용한 재료’까지 등장하게 됐다. 즉, 정전은 이승만 정권에게 있어서 결코 나쁜 이야기가 아니었고, 급변하는 국제정치에서 향후 통치에 관한 전망을 이러한 포로로부터 찾아낸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심도있게 고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각주로 대체.

¹¹ 「亞洲의 反共時急 蔣氏와의 同盟再提議」 『京郷新聞』、(1949. 07. 09)。

‘공산주의’에 반감이 있던 이승만정권은 ‘공산주의’를 ‘콜레라균’과 같이 ‘전염병 병원균’으로 취급했었다.

¹² 「그들은 우리 戰友였다」 『경향신문』、(1953.4.22)。

¹³ 「中立國軍入國反對 五個原則期必貫徹」 『경향신문』、(1953.04.07)。